

#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mailto:seogil.chang@kotra.or.kr))

2023.09.22.(금) 제23-105호

◆ [Focus]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 가시화 속 현지 반응 분석

◆ [What's News]

- (반도체) 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공개
- (반도체) 美 국방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 지원 대상 발표
- (규제) 美 하원 금융위, 신규 우려국 투자규제 법안 승인
- (무역통상) 美 무역 단체, 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정에 우려 표명
- (경협) 캐나다-일본 정부, 배터리 공급망 협력 MOU 체결

◆ [Top Headlines]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 FOCUS

### [섯다운]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 가시화 속 현지 반응 분석

#### 1. 미국 연방정부 기능정지(섯다운) 가시화

□ 연방 세출법 통과 난항으로 10.1부로 연방정부 섯다운 유력시

- '23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30(토)까지 연방 세출법 통과 가능성 불투명
  - 9.20 현재 기준 12개 세출법안 중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 상·하원 견해차가 커 양원 법안 중재에도 상당 시간 소요 예상
  - \* 의회는 법안처리 신속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12개 법안을 묶어 단일 옴니버스 법안으로 처리해왔으나, 지난 6월 부채 인상 협상 결과에 따라 이번에는 옴니버스 법안 처리 불가

□ 임시 세출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처리도 무산될 위기

-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 추가 삭감 △국경보안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등을 조건을 제시, 부결 강행 의사 표시
  - 의회 양당 지도부는 결의안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나, 공화당 강경파는 하원의장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섯다운 불사 입장
  - \* 의회가 한시적 잠정 세출안(직전 연도 예산 수준)을 결의함으로써 최종 연방 세출법안 통과 전까지 연방정부의 섯다운을 회피하는 제도. 2010~2022 동안 총 47차례 발효

- 백악관, 공화당 일부 강경파 맹비난, 셋다운이 불러올 부작용 경고
  - 미국 안보, 지역사회, 경제 등에 미칠 피해 우려(9.20자 성명)
    - △안보·치안 △재난 대응 △의료 연구 △교육 △여객 △보건·환경 등 핵심 정부 기능에서 불가피한 공백 발생 가능성 제기

## 2. 연방정부 셋다운 개요

- (근거법) 1884년 제정된 ‘재정 적자 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근거
  - 모든 연방 기관은 의회의 세출 승인 없이는 재정 지출 일절 불가
    - 따라서 의회가 당해 12개 세출법안 통과에 실패하는 경우, 연방 기관은 필수 기능(essential function)을 제외한 모든 기능 정지
    - 의회가 12개 중 일부 세출만 처리할 경우, 세출 승인을 받지 못한 연방 기관만 기능 정지하는 부분 셋다운(partial shutdown) 발생
- (기능정지) 공무원 인건비, 사업비, 시설 운영비 등 지급 중단 사태 발생
  - 셋다운과 동시에 비필수 공무원은 휴직(furlough) 상태에 돌입.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발적 근무도 금지
    - \* '19년 법 제정으로 셋다운 종료 후 월급 소급 지급
  - 필수 공무원(보건, 치안, 항공 관리 등)은 셋다운 종료까지 무급 근무
  - 셋다운으로 인해 사법부와 입법부 활동도 부분적 제약 불가피
    - 사법부 소속 판사 등은 휴직 대상이 아니나, 일반 법원 직원, 경비 인력 등은 관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필수 근무 또는 휴직 대상
    - 입법부의 경우, 의원들은 휴직 대상이 아니나, 의원실 또는 의회 직원은 직종에 따라 휴직 대상이 되어 입법 활동에 차질 발생 가능
  - 단, 연방정부 의무 지출 항목인 사회보장 연금 등 복지 지출 또는 국채 이자 등 채무 이행 등은 셋다운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지급

### 3. 과거 섣다운 사례 및 경제 영향

□ '76년 현대식 예산 체제 확립 이후 20차례 세출법 통과 지연 발생

- 그중에서 최소 1일 이상 유의미한 섣다운이 발생한 사례는 4차례
  - '95~96년(2차례, 26일) : 클린턴 정부-공화당과 지출 삭감을 두고 충돌
  - '13년(16일) : 오바마케어를 두고 상원 민주당과 하원 공화당 간 갈등
  - '18~19년(35일) : 트럼프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마찰, 부분 섣다운 돌입\*

\* 12개 세출법 중 5개 법안은 기통과

< 주요 미국 연방정부 섣다운 기록 >

기간	일수	휴직 공무원	정부 부담 비용	대통령	의회 지형	
					하원 다수당	상원 다수당
1995.11월	5	800,000명	4억 달러	클린턴	공화당	공화당
1995~1996	21	284,000명				
2013	16	800,000명	21억 달러	오바마	공화당	민주당
2018~2018	35	380,000명	50억 달러	트럼프	공화당*	공화당

\* (주) '19.1월 이후 민주당 다수당으로 변경

[자료] 의회 조사처(CRS) 및 기타 언론자료 취합

□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18~19년 최장기 35일간 있었던 부분 섣다운으로 180억 달러 정부 지출이 지연됐다고 보고('19.1.28)

- 이로써 '19년 1분기 실질 GDP의 약 2%에 달하는 80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중 30억 달러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평가
  - 장기간 섣다운으로 민간 기업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 효과 발생 분석
- 한편 '19년 상원 조사 보고서는 3차례 섣다운(2013, 2018, 2019년)으로 미국 납세자에게 최소 40억 달러의 손해 발생 분석

#### 4. 현지 반응 및 파급효과 분석

- 지난 6월 부채한도 협상 당시와 같은 금융시장 동요는 없을 전망
  - 미국 현지 전문가는 '95년 이후 발생했던 모든 섯다운에서 S&P500 지수는 오히려 평균 3.2% 상승했다고 분석하며,
    - 연방정부 섯다운은 초유의 사태가 아니며, 정부 채무불이행 사태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예상
  -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경제 이슈(고에너지 가격, 자동차 파업,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가 섯다운과 맞물려 불확실성을 증폭할 수 있다고 분석
- 골드만삭스(9.1)는 전면 섯다운 시 GDP 성장률이 매주 0.2% 감소 예상
  -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나, 섯다운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한편, GDP,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정부 주요 경제 통계 집계에 차질이 발생하여 11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려움 예상(Pimco, 9.19)
- 필수 정부 기능 유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느낄 섯다운 부작용 지대 전망
  - 다수의 정부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한다고 해도, 전면적인 정부 섯다운에 따른 미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복지) 사회보장 연금 등 지출은 지속되나, 행정 처리 지연 사례 다발
    - (환경·식품) 수질 및 유해 물질 관리, 식품 안전성 검사 등에 차질
    - (항공) 연방항공청 비필수 인력휴직으로 공항 관리에 문제 발생
    - (세무) 연방 국세청의 세무 업무, 세금 환급 등의 지체 불가피
    - (구호) 저소득 식량 구호 프로그램 예산은 유지되나, 행정 혼선 발생
    - (기타) 국립보건원(NIH) 업무 범위 축소, 국립 공원 폐쇄 등 불편 가중

□ 내년도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손익 분석 부분

- 전문가들은 정부 셋다운이 내년 선거에서 바이든 정부, 민주당, 공화당 등 어느 쪽에도 유리한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하지만, 메카시 하원의장과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일부 의원 간 마찰이 협상 파행의 원인이 되는바, 언론에서 공화당 책임론 팽배
  - 많은 공화당 중도 성향 또는 초선 하원 의원들은 차기 선거에서 셋다운 역풍을 우려해, 강경파 의원들 주장과 거리두기 중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워싱턴포스트([9.20](#)), 브루킹스연구소([9.17](#)), CRS([2018.12월](#)) 등

□ **(반도체) 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공개**

- (개요) CHIPS Act 수혜 기업의 우려국 내 시설 확장 및 우려국과의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 공개(9.22)
  - 이번 최종 규정은 상무부가 '23.3월 공개한 초안에 공개 이후 60일간 접수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
- (상세) 시설 확장 제한은 기존과 동일, 다른 부문에서 기존 규정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
  - (시설 확장) 10년간 우려국 내 시설의 첨단·레거시 반도체 생산 능력 (production capacity)을 각각 5%,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
    - \* 상무부는 5% 수준에서 시설·생산라인의 일반적인 보수·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고려
  - '시설 확장'을 "물리적 공간·장비 추가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으나, 최종안은 장비 추가를 제외
    - \*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량 확대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상무부의 기존 견해가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장비 교체는 허용될 예정
  - (용어 정의) 반도체 제조(semiconductor manufacturing)의 정의에 웨이퍼(wafer) 및 기판 생산(substrate production)을 추가
  - (생산 능력) 평가 기준을 월별 웨이퍼 수에서 연간 웨이퍼 수로 변경
    - \* 월별 웨이퍼 생산량은 변동성이 크다는 업계 의견 반영(블룸버그)
  - (투자 제한) 우려국 내 시설 투자 관련 10만 달러 상한선은 제외, 신규 상한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기업에 상무부가 개별 통보할 예정
  - (연구 개발) 국제 표준 관련 활동, 특허사용 계약 등 기존 운영에 필요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에는 제한 미적용
  - (품목 분류) 양자컴퓨팅, 방사선 집약적 환경, 기타 특수 군사 기능에 사용되는 첨단·레거시 반도체는 국가 안보 품목으로 지정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준성
▪ 자료원	상무부 보도자료(9.22,9.22), 블룸버그(9.22)

□ **(반도체) 美 국방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 지원 대상 발표**

○ (개요) CHIPS Act 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혁신 허브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해 지원 대상을 발표(9.20)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미국이 연구·설계 분야에서 앞서지만, 제조는 위탁 업체에 의존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첨단 기술 산업으로 고려됨

\* 미국은 전 세계 마이크로전자제품 생산의 약 12%만을 담당

○ (상세) 총 8개 지역 허브에 2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

\* 지원 기관은 군수, 보안 컴퓨팅, 인공지능 하드웨어, 5G 및 6G 무선, 양자 기술에 특화

- 캐슬린 히스 국방차관은 이번 정부 지원이 R&D, 제조 역량 강화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 미군이 운용하는 장비에 우선 도입하며 군용 제품에 대한 공급망 탄력성과 보안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국방부가 선정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소>

순번	기관명	지역(주)	직원 규모(명)	지원액
1	Northeast Microelectronics Coalition Hub	매사추세츠	90	19.7
2	Silicon Crossroads Microelectronics Commons Hub	인디애나	130	32.9
3	California Defense Ready Electronics and Microdevices Superhub Hub	캘리포니아	16	26.9
4	Commercial Leap Ahead for Wide Bandgap Semiconductors Hub	노스캐롤라이나	7	39.4
5	Southwest Advanced Prototyping Hub	애리조나	27	39.8
6	Midwest Microelectronics Consortium Hub	오하이오	65	24.3
7	Northeast Regional Defense Technology Hub	뉴욕	51	40.0
8	California-Pacific-Northwest AI Hardware Hub	캘리포니아	44	15.3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준성
- 자료원 | 국방부 보도자료(9.20)

## □ [규제] 美 하원 금융위, 신규 우려국 투자규제 법안 승인

- (개요) 美 정계는 미국인의 대중 투자를 감독하기 위해 노력 중
  - 상원은 케이시·코닌 의원의 해외투자 투명성 제고 법안(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포함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투자심사 행정명령 발효(8.9)
  - 하원은 행정부와 상원의 노력이 대중 투자 감독의 첫 단계로는 적절하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개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음.
- (상세) 하원 금융위는 대중 투자규제 관련 신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9.21) \* Chinese Military and Surveillance Company Sanctions Act of 2023
  -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감시기술 산업과 연루된' 기업으로 지정한 경우, 제재(sanction)를 부과해 미국인 투자·거래를 차단
  - 재무부 장관이 투자 감독에 집중할 산업군을 (1)인공지능, 머신러닝, (2)고성능 컴퓨터,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3)양자컴퓨팅, (4)로보틱스, 생산 자동화 기술, (5)첨단 통신 기술, (6)바이오테크놀로지, 유전학, (7)데이터 저장·관리 기술, 사이버 보안 등으로 지정
  - 현지 언론은 동 법안이 중국의 국방·감시기술 확산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기 위한 미 정계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폴리티코(9.21)



## □ [무역통상] 美 무역 단체, 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정에 우려 표명

- (개요) 美 무역단체, 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정에 경제적 손실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지원책 마련 촉구
  - 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정은 ▲(기업)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의무화 ▲(레스토랑) 일회용 포장재 사용 금지 ▲(호텔) 일회용 비누, 샴푸 병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상세) 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제는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
  - 산업 관계자들은 미국의 농업, 주류 및 유제품은 포장재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EU의 규제가 시행된다면 수출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
  - 포장 폐기물 관련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면제 또는 유예 조치 마련을 요구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플리티코(9.19),

## □ [경협] 캐나다-일본 정부, 배터리 공급망 협력 MOU 체결

- (개요) 양국 핵심 광물·배터리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 각서(MOU) 체결
  - 니시무라 일본 경제 산업성 장관은 지난 9.21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캐나다 천연자원부 및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와 별도 MOU 체결
- (상세) 일본, 핵심 광물 조달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평가
  - 양국은 캐나다에 매장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 개발에 협력, 일본이 광물 채굴·정체 처리를 위한 자본 투자 및 기술 제공 예정
  - 또한, 일본 기업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신설을 위한 공적 지원에 합의
  - 캐나다는 800억 캐나다 달러 규모 청정산업 투자 인센티브 법제화 중
- (향후) 양국은 연례 검토 및 투자 기회 교류 등 실행계획 수립 예정
  - 캐나다 정부, 10월 일본 G7 무역장관 회의 시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마민서
▪ 자료원	PoliticoPro(9.21), CBC(9.20), NHK(9.21)

##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a href="#">UAW Strikes at More GM and Stellantis Sites, but Spares Ford</a> (전미자동차노조, 포드를 제외한 GM·스텔란티스 대상 파업 확대)</p> <p>전미자동차노조, GM과 스텔란티스 사업장에 근무 중인 5,600명 대상 추가 파업 지시. 단, 포드와는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해서 추가 파업 대상에서 제외</p>
The Washington Post	<p><a href="#">U.S., China agree to forge new economic, financial dialogues</a> (미중 양국, 경제 및 재무 신규 대화채널 개설 합의)</p> <p>미 재무부, 중국과 경제 및 재무 사안 논의 위한 신규 워킹그룹 2개 결성 발표. 이는 옐런 장관의 지난 여름 방중 후속조치로 양국 소통 개선의 신호로 보여</p>
The New York Times	<p><a href="#">Across Washington, Officials Brace for Government Shutdown</a> (셋다운 준비를 시작하는 워싱턴)</p> <p>급여 선금금을 지급하는 등 의회 및 연방기관은 셋다운을 대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공화당 강경파와의 합의 도출에 애로 겪는 중</p>
CNN	<p><a href="#">Schumer in talks with McConnell as shutdown fears grow: 'We may now have to go first'</a> (슈머와 매코널, “상원이 먼저 행동을 취해야할 수도 있어”)</p> <p>양당 상원 지도부인 슈머와 매코널은 매카시 하원의장의 합의를 기다리려 했으나 하원 상황으로 인해 상원에서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고려 중</p>
USA Today	<p><a href="#">Menendez steps down as chair of Foreign Relations after bribery charges</a> (메넨데스, 뇌물 수수 혐의에 상원 외교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p> <p>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메넨데스 의원이 일시적으로 상원 외교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밝혀. 메넨데스 의원은 아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음</p>

\* 미국 동부시간 9월 22일 15시 기준

## Notice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27	<a href="#">미국 연방정부 섣다운 가시화 속 현지 반응 분석</a>	2023.09월
US23-26	<a href="#">신규 회계연도 임박, 美 의회 예산안 입법 동향</a>	2023.09월
US23-25	<a href="#">2022년 주요국 해외투자 동향(UNCTAD 보고서)</a>	2023.09월
US23-24	<a href="#">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수소 전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3.08월
US23-23	<a href="#">해외투자 심사 관련 상원 법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3.07월
US23-22	<a href="#">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분석</a>	2023.07월
US23-21	<a href="#">IPEF 4차 협상 주요 내용 및 현지 기관 분석</a>	2023.07월
US23-20	<a href="#">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a>	2023.06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헤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 획7	<a href="#">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a>	2023.01월
US22-기 획6	<a href="#">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a>	2022.12월
US22-기 획5	<a href="#">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a>	2022.12월
US22-기 획4	<a href="#">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a>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4 (2023.6.30)	 <p>전미자동차연구센터(CAR) '앨런 아미사'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p>	
코인시-13 (2023.6.26)	 <p>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켄달 스투리버'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p>	